

韓총리 “해상풍력 규제 해소, 중앙-지방 협력 최선”

신안군 소재 국내 최대 해상풍력 단지·목포신항 시찰 금지사, 차등요금제 강조...통합의대 신속 추진도 건의

한덕수 국무총리가 18일 “해상풍력 발전 사업의 어려움으로 제기되고 있는 규제 문제 해소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협력에 개인 모든 역량을 쏟아붓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전남해상풍력발전단지를 헬기로 시찰한 뒤 “기업들이 해상풍력발전 사업 추진을 위해 가져야 하는 수많은 규제를 최대한 단순화하고 1-2년이라도 단축할 수 있도록 중앙 정부가 나서서 기업과 지자체 문제를 조정하고 해결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신안군 자은도 북서쪽 해상에 위치한 국내 최대 규모 해상풍력발전단지과 배후 부지인 목포신항을 시찰하고 산업계와 지방자치단체 의견을 청취했다.

민간 자본 48조원이 투입되는 전남해상풍력발전단지는 총 26개 단지에 8.2GW(기가와트) 용량의 발전 설비를 갖춘 세계 최대 규모 해상풍력단지로 조성되고 있다.

2025년 상반기 상업 운전을 앞둔 전남해상풍력 1단지는 9.6MW(메가와트) 풍력기 10기 총 96MW 규모의 발전시설을 갖추게 되며 투자금은 약 9천억원에 달한다. 국내 최대 100MW급 규모이자 최초의 순수 민간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사업으로 SK 이노베이션 E&S와 덴마크 해상풍력 기업인 CIP가 각각 51%, 49%의 지분으로 사업에 참여했다.

목포신항은 국내 유일 해상풍력 지원 항만으로 해상풍력 전용 항만 조성을 위한 철재 부두가 건설될 예정이다. 해상풍력 부품 공급 업체 등이 입주하는 배후단지도 조성된다.

한덕수 총리는 “해상풍력 활성화는 에너지 안보의 기반을 든든하게 하고 전남이 신재생에너지 선도지역으로 거듭날 계기가 될 것”이라며 관계 부처에 긴밀한 지원 조치를 강구할 것을 현장에서 지시했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이날 간담회에서 해상풍력 메카, 전남이 대한민국 탄소중립과 균형발전을 이끌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특히 전력계통 부족 문제 해결을 비롯한 정부 차원의 대책을 건의하며 재생에너지 활성화를 위해 수도권과 지방에 50%씩 전력을 소비하는 혁신적인 방안을 설명하고 구체적인 해법도 제시했다.

김영록 지사는 “현재 검토 중인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는 권역별(수도권·비수도권·제주)로 논의의 중이나 이번 기회에 국가 균형발전 측면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해상풍력 확산을 위해 도 단위 차등화 기준이 필요하며 저렴한 깨끗한 전기를 찾아 데이터센터, 반도체, 이차전지 등 에너지 다소비 기업이 지역으로 이전하면 전력계통 안정과 더불어 수도권 1극 체제까지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남도는 지난 4월 산업부에 신안 3.7GW 규모의 해상풍력 집적화단지를 산업통상자원부에 신청했으며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을 가로막는 각종 규제 개선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영광 낙월-신안 우이 해상풍력 등 후속 발전 사업들도 준공까지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적극 지원해 30GW 대규모 해상풍력발전단지를 건설할



18일 오후 목포 신항만 해상풍력 배후부지를 방문한 한덕수 국무총리(가운데)가 김영록 전남지사 등 관계자들과 시설을 둘러본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전남도 제공>

하는 구상이다. 이와 함께 김 지사는 이날 지역 최대 현안인 전남도 국립의과대학 설립도 건의했다. 김 지사는 “지난 15일 목포대-순천대가 상생·화합과 통합정신을 바탕으로 미래지향적 성장

통합을 위해 대학 통합과 통합의대 추진에 합의했다”며 “전남도가 오는 22일까지 ‘통합의대’ 정부에 추천하면 정부에서 2026학년도 의대 신설 및 정원 배정 절차를 신속히 추진해달라”고 요청했다. /양시원 기자

‘전남형 균형발전 300 프로젝트’ 여수·화순·영암·장성 등 4곳 선정

내년부터 4-5년간 지역 핵심 동력사업에 1천220억 투입

지역의 미래 성장을 견인할 시·군 핵심 동력사업을 육성하기 위한 ‘전남형 균형발전 300 프로젝트’ 공모에 여수시와 화순군, 영암군, 장성군 등 4개 시·군이 선정됐다.

18일 전남도에 따르면 선정된 사업은 여수시의 ‘여수로 섬-잇(Sum-it) 트레일’, 화순군의 ‘화순군 한국산 산업화단지 조성사업’, 영암군의 ‘전남 대표 K-Culture 지역 육성, 영암 헤리티지의 재도약 프로젝트’, 장성군의 ‘장성 원더랜드(Wonderland) 프로젝트’다.

2025년부터 4-5년간 총 1천220억원을 투입해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다만 재정 여건 등을 감안해 여수시와 화순군은 2025년부터 착수하고 영암군과 장성군 사업은 2026년부터 시작할 예정이다. ‘전남형 균형발전 300 프로젝트’는 그동안 중

앙 공모에만 의존했던 지역 개발 방식에서 벗어나 시·군이 자율적으로 사업을 기획하고 도에서 지원하는 대규모 발전 프로젝트다.

지역 경쟁력을 강화하고 주민 삶의 만족도 제고와 자립적 성장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표를 두고, 개소당 총사업비 300억원 규모로 도비 60-70%를 지원하며 300억원 초과 분은 시·군에서 부담한다.

선정된 4개 사업은 17개 시·군의 신청 사업에 대해 관광·농업·산업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단이 1차 사업계획서 서면평가로 9개 사업을 선정한 후 2차 발표, 현장평가를 통해 지역 수요와 지방소멸위기 대응 등 사업의 적절성과 사전행정 절차, 균형발전도 등을 종합평가해 선정했다.

/김재정 기자

의대범도민추진위 “목포대·순천대 통합 환영”

허정 위원장 “통합의대 설립 지원 힘쓸 것”

전남도 국립의과대학 설립 범도민추진위원회 허정 위원장이 목포대와 순천대의 대학 통합 합의에 환영의 뜻을 표명하며 통합의대 설립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했다.

허 위원장은 18일 환영문을 통해 “지난 15일 목포대와 순천대가 대학 통합에 합의하고 통합 의과대학 설립을 결정한 것에 온 도민과 함께 환영의 뜻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통합의대 설립은 전남의 열악한 의료 환경을 개선하고 도

민 모두가 어디서나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든든한 토대가 될 것”이라며 “전체 도민의 건강권과 생명권을 지켜낼 지역완결적 필수요체제 완성을 위한 핵심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허 위원장은 “범도민추진위원회는 18만 도민의 역량과 의지를 하나로 모아, 전남도 국립의과대학이 설립되는 그날까지 모든 노력을 다해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재정 기자

“병역명문가, 도립미술관 관람료 면제”

이규현 도의원 대표발의 조례안 상임위 통과

전남도의회 이규현 의원(더불어민주당·담양2)이 대표발의한 ‘전남도립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8일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개정 조례안은 전남 병역명문가에 해당하는 21가구를 대상으로 전남도립미술관 관람료를

면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조례 개정을 통해 전남 병역명문가와 가족을 대상으로 전남도립미술관의 관람료를 면제해 병역명문에 대한 자긍심을 높이고 건강한 병역 문화 정착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재정 기자

Panasonic

경험하지 못한 절대휴식
REAL PRO MAN1

KOREA 세일 페스타

MAN1 50만원DC + 상품권20만원 + 무선청소기

4년 무상보증 (1년+3년)

GOOD DESIGN AWARD 2023

안마의자 MAN1 구매고객 대상 50만원 DC + 상품권 20만원 (기간: 2024.11.01 ~ 2024.11.30) + **무선청소기**

MAK1	MAJ7	MAF1	MA32	MAC3	MAC9	MA22	MA05

*판매점에 따라 혜택은 다소 상이합니다

파나소닉 프라자 062)522-2000 광주광역시 북구 금남로24 (임동5거리) 직영서비스센터
파나소닉 금호월드점 062)350-8397 광주광역시 서구 군본2로 54, 금호월드 1층 139호